데스크 시각

'손톱밑 가시' 빼랬더니…

정후식
정치부장·편집부국장

신군부의 서슬 퍼런 탄압 아래 5·18의 생채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던 1981년 늦가을, 광주시 북구 운암동 소설가 황석영씨 집 2층 구석방에 지역 연행(演行)예술운동패 회원들이 모였다. '빛의 결혼식'으로 이름 지어진 노래극 '넋풀이' 제작을 위한 비밀 회합이었다. 광주항쟁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을 지키다 산화한 고(故) 윤상원 열사와 1979년 노동현장에서 숨진 박기순 열사의 '영혼결혼식'이 테마였다.

노래극 마지막 부분에 들어갈 '부활의 노래'는 백기완씨의 시 '묏비나리'를 토대로 황씨가 각색한 노랫말에 1979년 대학가요제에서 '영랑과 강진'으로 입상했던 전남대생 김종률씨가 밤샘 작업 끝에 곡을 붙였다.

이 노래는 밀폐된 방에서 카세트테이프에 녹음돼 은밀히 보급됐다. 이젠 민중가요를 넘어 대중가요로 애창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탄생 순간이다.

'오월 광주' 일으켜 세운 노래

오월 광주는 물론 노래운동사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이 차지하는 의미는 각별하다. 1980년대 초 주체할 수 없는 패배감과 살아남은 자의 죄의식에 젖어 있던 광주시민들에게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는 호소는 한줄기 구원의 빛이었다. 자괴감과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승리의 의지를 북돋워준 것이다.

핏빛 구호 가득한 전투적 운동가요에서 벗어나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로 시작되는 가사와 서정성 가득한 단조풍의 가락도 진일보한 것이었다.

엄혹했던 5공 시절, 이 노래가 순식간에 대학가로 퍼져 각종 집회 때 '민중의례'에 사용되고, 6·10 항쟁 등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는 어김없이 불린 것도 그런 맥락에서였을 것이다. 2004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때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군악대 반주에 맞춰 끝까지 불러 화제가 됐다.

일부 동남아 국가에 번안돼 민중의 노래로 애창되기도 했다. '새날'을 갈망하는 노랫말은 이제 민주주의의 역사가 되었다.

지난 30여년 동안 5·18 기념행사에서 추모곡으로 불려온 '임을 위한 행진곡'이 퇴출 위기를 맞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올해 기념식을 앞두고 별도의 공식 추모곡을 제작하기 위해 4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 광주일보 취재 결과 확인된 것이다. 여기에는 국회의 부실한 예산 심사도 한몫했다. 민주당뿐 아니라 호남 의원들조차 면밀한 검토 없이 통과시켜 준 것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식에서 배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5·18 기념식에선 이 대통령이 참석, 유족과 함께 합창했지만 이듬해 갑자기 사라졌다. 여기에 정부의 '민중가요 의례 금지 조치'까지 내려지면서 2009년 말 국가보훈처가 5·18 공식기념노래를 국민 공모로 뽑는다고 발표했지만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후 2010년에는 난데없는 '방아타령'이 대신하는 등 '임을 위한 행진곡'이 3년 연속 식순에서 배제되면서 보훈처와 5월 관련 단체가 기념식을 따로 치르며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국가보훈처가 5·18 공식 추모곡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표면적인 이유는 3·1절, 8·15 등 정부 기념행사에는 기념노래가 있는데 5·18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중가요는 불순하다'는 선입견에 광주정신과 5·18의 역사가 오롯이 담긴 '임을 위한 행진곡'조차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분위기도 읽혀진다.

'오월 유산' 시민에게 돌려줘야

국가보훈처의 임무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섬기고 기념·추모행사를 통해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오월의 유산에 자긍심을 갖고 선양하는 것도 지당한 의무다.

다시 오월이다. 33주년을 맞는 올 5·18행사는 '33'이라는 숫자만큼 충만하게 해원상생(解冤相生)의 대동한마당으로 치러져야 한다. '다시 평화와 통일로'라는 슬로건이 그 의지를 반영한다. 정부는 '역사 지우기'를 의심케 하는 소모적인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올해 기념식에선 '임을 위한 행진곡'이 당당하게 울려퍼지도록 광주 시민에게 돌려줘야 마땅하다. /who@kwangju.co.kr

은펜칼럼

차별금지법안 제정되어야 한다

임명재
약사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 일부 반대세력들의 거센 항의에 의해 입법이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평등한 사회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무산되어 아쉬움이 크다. 법안에 대해 일부 개신교단체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마치 이것이 서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자의 혼인합법화 정도 되는 사안으로 확대해석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장치를 무력화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IMF와 금융위기 등을 헤쳐나오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 기업들은 현금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설비와 기술개발에 투자하기보다는 현금을 확보하여 과거의 고통을 회피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부자감세와 친대기업 정책을 통해 사회전반에 대한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지만 기업은 자신들의 안위만 걱정한다. 소위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FTA를 통해, 겉으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주창하며 경제력의 집중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스스로의 경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과 서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경쟁력을 알아서 키우라며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기조가 사회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경쟁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기득권자와 없는 자, 다시 말해 강자와 약자의 구도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갑자기 근래에 들어 이런 현상이 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고대로부터 이미 다양성을 키워왔다. 반도국의 태생적 강점으로 대륙과 해양으로부터 우리는 여러 민족들과 다양한 경제, 문화 그리고 종교들을 나누어 왔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단일민족에 대한 자랑스러움은 자칫 국수주의적이고 배타적이 되어, 과거 히틀러의 나치즘이 그랬던 것처럼, 로마와 스페인을 비롯한 수많은 거대제국들이 멸망의 단초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의 경쟁력을 갉아먹게 될 것이다. 이미 100만에 육박하는 국제결혼과 그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스스로 채우지 못하는 노동력의 사각지대를 외국의 근로자들이 보충해주고 있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 등지에서 흘어져 살아야만 했던 우리의 핏줄들이 귀향하고 있다. 이들은 약자들이다. 참으로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틈바구니에서 이리저리 밀쳐지며 힘겹게 살고 있는 이들이 우리를 지배자나 착취자로 원망하며 살고 있지나 않은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충분한 투자와 관심을 통해 이들을 완전한 한국인화 시켜서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기둥으로 역할을 맡게 해야 한다.

성적소수자들의 문제이다.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면 그걸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들은 다른 것이다. 이 문제를 창조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신에 의해 탄생된 것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다른 인간을 멸시하거나 핍박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종교인이 배타적인 기준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종교가 추구하는 사랑과 자비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야 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위에 열거된 것들을 포함하여 남과 여, 학벌, 출신지역, 노동의 신분 그리고 신앙 등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차별금지법안은 대한민국이 사람답게 사는 곳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 번 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하고, 발의를 철회한 민주당과 의원들은 정치 철학의 실현을 위해 신념있는 자세로 본분을 다해주길 바란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고

봄철 주의해야 할 산업재해

정재종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장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봄은 희망의 계절이다. 땅속에 동면하던 동물들이 깨어나고 산과 들에 새싹이 돋아나는 등 만물이 겨울의 속박에서 벗어나 꿈틀거리는 시기이다. 반면 봄철에는 신체적 나른함과 춘곤증으로 한순간의 방심이 각종 산업재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작년 한해 봄철에 광주·전남지역 산업현장에서 1597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그 중 47명이 사망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재해는 계절별로 다소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산업재해(47만7820건)를 조사 분석한 결과로는 요즘과 같은 봄철에는 뇌심질환, 사고성 요통,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체육행사 재해가 다른 계절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이러한 유형의 재해 예방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질병 사망 재해자도 봄철에 29.4%로 다소 높게 발생하고 있다. 이중 뇌심질환 재해자는 약 33%가 발생하는데 특히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은 40%에 이르는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일일 기온 차가 큰 봄철에는 과도한 육체적 노동을 피하고 뇌졸중, 심근경색 등 뇌심질환 예방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봄철에는 사고성 요통 및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말미암은 산업재해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겨울에 활동이 적어 몸이 굳은 상태에서 과도한 근육과 관절 사용으로 발생하는 만큼 작업 시작 전에 체조 등 충분한 준비운동이 필요하다.

한편, 봄철에는 회사의 체육행사 등 야외행사 중에 재해가 타 계절에 비해 많이 발생(37.5%)하는데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 주고 특히 음주상태에서의 운동은 삼가야겠다.

주의력이 떨어지는 봄철에는 각종 작동중인 기계에 의한 끼임 사고 역시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끼임 사고는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춘곤증 있는 시간대에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칭을 통해 춘곤 증세를 극복해야 한다.

올해 들어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화학공장에서 크고 작은 화재폭발 사고 및 유해물질 누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달 21일에는 우리 지역인 여수 석유화학단지에서도 대형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고가 발생한바 있다. 요즘 건조한 날씨가 지속하면서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정전기 등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들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일터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고는 위험에 대한 무지와 안전불감증이 주된 원인이다. 산업재해 발생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위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평상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말아야 한다. 우리 지역의 모든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 없는 무재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농어촌 학생 위해 원어민 교사 등 적극 지원해야

얼마 전 서울에서 살다가 올 봄에 고향으로 귀촌한 고모가 전해준 이야기다. 고모 네가 내려갈 당시 초등학생 4, 5학년 남매가 있었다. 아이들은 서울에서 나름대로 공부는 좀 했다. 고향으로 이사를 하던 때가 겨울방학이었고 새학기 개학과 더불어 최근에 중간고사를 치렀던 모양이다.

이때 고모나 아이들은 아이들이 다른데도 아닌 서울에서 공부 좀 했으니 지방에서 당연히 최고등수가 나올 걸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그게 아니었다. 솔직히 서울에서 평균 97점 안팎을 받던 4학년 딸과 가끔씩 1등도 하던 5학년 아들. 둘 다 그만한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며 놀라워 했다. 즉 평균 점수는 서울에서와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만한 점수는 그 지방 아이들도 몇 명이 있었고, 그보다 나은 아이도 있었다며 놀라워 했다.

고모네가 지방학교 아이들의 학습력이 서울에 비해 뒤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게 착각이 된 것이다. 시골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 잘하는 줄 몰랐다며 고개를 저으며 크게 반성했다는 것이다.

우리 농촌의 아이들, 참 건강하고 맑게 잘 자라는 미래의 희망이다. 학습능력 역시 도시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는다. 이런 미래의 인재들이 학원 같은 시설이나 여건이 안 따라줘 도시 아이들에 뒤쳐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해줘야 할 몫이다. 그중에 하나가 영어 같은 원어민을 구경하기 힘든 분야들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도 어려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배우는 농어촌 청소년과 교사들, 이 모두를 위해 앞으로 정부는 농촌 청소년들이 여러 분야에서 학습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기 바란다.

▲김옥임·순천시 인제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박 정부 지방육성책도 광주·전남 소외인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육성정책이 오히려 광주·전남의 낙후를 심화시키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 호남 소외정책인 영남 2, 호남 1의 '5+2 광역경제권'과 마찬가지로 박 정부의 '10+α' 사업도 광주·전남의 약점인 인구 비중에 따라 지원 권역을 구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10+α' 안을 보면 6대 광역시를 비롯한 지역 거점 도시권 10~20개를 집중 개발해 그 발전의 성과를 인근 위성도시까지 미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인구가 밀집된 지역 위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여서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광주·전남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2012년 말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의 전국 인구 대비 구성비율은 각각 2.9%(148만3708명), 3.7%(195만6822명)로 두 지역을 합해도 6.6%에 불과하다. 반면 부산 6.9%, 대구 4.9%, 경북 5.3%, 경남 6.5%를 비롯해 대전을 포함한 충·남북지역도 10.1%에 이른다.

결국 '10+α' 계획도 인구를 중심으로 할 경우 광주·전남은 최대 20개 중 3개 권역만 배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 때 '5+2' 정책으로 호남과 영남의 지원예산도 두 배 이상, 정부지원 대형 프로젝트도 호남은 8개, 영남은 16개로 2배의 차이를 보이는 등 지역격차가 심화돼 왔다.

정부는 '10+α' 계획이 지역균형발전을 골자로 하는 만큼 인구 중심이 아닌 낙후도를 기준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 이는 박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국민대통합과도 부합하는 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10+α'를 강행한다면 투쟁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호남 인사 홀대도 모자라 지방육성책마저 버젓이 눈을 뜨고 당할 수만은 없다.

젖소 수천마리 한우로 속여 판매하다니

늙고 마른 젖소 수천 마리를 고급 국내산 한우 또는 육우라고 속여 수십억 원어치를 유통한 악덕업자들이 검거됐다. 더욱이 업자들은 상품가치가 떨어진 젖소를 도축한 뒤 어린이나 임신부 등 소비자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 크다.

경찰은 불법 유통업자 10여 명을 붙잡아 조사 중에 있으며, 유통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젖소를 한우 생고기 또는 불고기 용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식당 주인들도 입건했다. 이번 젖소의 한우 둔갑 사건으로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악덕업자의 행태와 당국의 허술한 유통관리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유통업자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올 3월 말까지 광주의 한 도축장 등에서 등외등급으로 분류된 국내산 젖소 4795마리를 도축한 뒤 시중에 86억 원어치를 유통·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한다. 특히 도축한 젖소고기를 버젓이 도시락업체나 아동센터 등에 납품했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피해자 대다수가 건강에 더 신경을 기울여야 할 어린이나 임신부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관계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년 가까이 불법 도축과 함께 유통을 해왔는데도 이를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또, 식당 주인들이 한우전문 식당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해온 만큼 지자체의 허술한 식품위생 행정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유통업자나 식당 주인들이 먹을거리를 놓고 농간을 부리는 것은 소비자에겐 억울한 일 그 자체다. 한우라고 속은 것도 모자라 제값마저 치르지 않았는가.

악덕업자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은 당국의 무관심과 솜방망이 처벌이 주된 요인이다. 관계기관에선 농축산물 관리가 규정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감독해야 한다. 사법 당국도 구속수사 원칙 등 엄벌에 처해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아베의 코미디

"나는 적성(赤誠·마음에서 우러나는 참된 정성)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의 일원이 되어 적국의 수괴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 나선 이봉창(李奉昌) 선생이 1931년 12월31일, 안중근 의사의 아우인 안공근의 집에서 '일왕 히로히토 저격'을 맹세하며 한 선서다. 백범 김구 선생과 함께였다. 이 선생이 양복을 입고 양손에 수류탄을 쥔 채 벽에 걸린 태극기를 배경 삼아 포즈를 취하고 있는 유명한 사진이 바로 이때 찍은 것이다.

이 선생은 이듬해 1월 8일, 일본 도쿄에서 관병식을 마치고 궁성으로 돌아가던 일왕을 겨냥해 사쿠라다문(櫻田門)에서 수류탄을 던졌으나 거사는 실패로 돌아갔다. 현장에서 붙잡혀 같은 해 9월30일 도쿄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 선생은 10일 뒤 이치가야(市谷) 형무소의 교수대에서 조국 해방의 비원(悲願)을 가슴에 품은 채 숨졌다.

이 선생의 의거(義擧)는 우리 민족에게 처절하고 처연한 '역사적 사실'이건만, 요즘 일본의 행태를 보면 돌아가신 이 선생이 관 속에서도 웃을 정도다.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 어느 쪽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아베 총리가 지난달 23일 참의원 답변에서 한 이 말은 '이웃에 등돌리고 역사를 부정하며,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후안무치한 일본의 진면목을 드러내 보여준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촉발된 태평양전쟁에서 연합군 군함을 공격하기 위해 자폭 비행기에 올라탄 가미가제 특공대원들은 "야스쿠니 신사에서 만나자"는 말을 남기고 출격했다.

아베 총리의 관점에선 이봉창 선생은 테러리스트, 가미자제 대원들은 애국자일 게다. 우리와 세계의 관점에선 역사적 맥락과 사실을 무시하는 아베 총리의 발언은 코미디일 뿐이다.

/홍행기 사회1팀장 redplane@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회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제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조사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